원칙 vs 변칙…스타일 다르지만 북핵·사드 공감대 찾기

29~30일 트럼프와 정상회담 통해 국제외교무대 데뷔

한·미 FTA 논의도 불가피
갈등 부각 보다 협력 강조할 듯
25일 일정 비우고 회담 준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외교 무대에 첫발을 내디딘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한국 외교, 특히 정상외교에 있어 의미와 파급력이 막중하다는 게 일반적 지적이다. 단순한 한·미 양자외교 차원을 넘어 한국이 앞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해나갈 것이냐를 가늠해보는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출범한 지 각각 40여 일과 4개월 여밖에 안 된 '걸음마 단계'의 정권이라는 점이다. 대외정책의 세부 기조와 인적 진용이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국 정상의 '개인기'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외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두 정상의 외교스타일은 매우 대조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일관된 원칙과 목표를 중시하며 '정공법'으로 승부를 거는 방식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에 따라 능수능란하게 전략을 바꿔가는 '임기응변' 또는 '변칙'형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이에 따라 두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이슈가 될 북핵 문제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이견을 표출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첫 과제가 될 북핵 문제와 관련, 두 정상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최종 목표와 이를 위해 제재와 압박은 물론 대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큰 틀에서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북핵 폐기 방법론의 선후 관계와 강조 포인트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때마다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대화를 강조하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되 당장은 경제·외교적인 수단을 활용한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로 요약된다. 대화보다는 제재에 방점을 둔 셈이다.

사드 배치 문제도 백악관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엄밀히 따지면 사드 역시 북핵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하나의 수단이어서 정식 의제로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 문제가 한미동맹은 물론 중국까지 결부된 외교·경제 문제로 비화했고, 무엇보다 국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양 정상 간 의견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문 대통령은 최근 잇단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이 한미동맹으로 양국 정부에 의해 이뤄진 것이어서 "그 결정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환경영향평가 지시 역시 민주국가로서 국내법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해 미국 측에 양해를 구한 바 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한국 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인 상태다. 문 대통령이 국내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지만 사드 배치 결정을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용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미 FTA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의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 기조를 분명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미국 무역 적자의 주요 축으로 인식하는 만큼 문 대통령이 이를 완화할 큰 틀의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 같은 이유로 문 대통령은 25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4일 앞으로 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하루 종일 청와대에 머물면서 참모진들로부터 방미 일정과 준비 상황 전반에 대해 보고받고 각 행사에서 제시할 메시지와 연설문 등을 점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文대통령의 손가락 하트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열린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어린이 공연단과 손가락 하트를 만들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방미경제인단 52명…중견·중소기업인이 37명

정의선·최태원·구본준…
삼성 이재용 대신 권오현
광주·전남 이기승·김보곤

문재인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에는 재계를 대표하는 유력 기업인들이 대거 동행한다.

방미 경제인단은 미국 기업인들과 교류하며 현지 투자·사업 기회를 타진하는 등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외교의 중요한 축을 차지할 전망이다. 특히 재계에서는 경제인단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방미 경제인단에는 대기업 10명, 중견기업 14명, 중소기업 23명, 공기업 2명, 미국계 한국기업 2명, 주관 단체인 대한상의의 박용만 회장 등 총 52명이 참가한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준 LG그룹 부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구자열 LS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총출동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수감으로 총수가 참가하지 못하는 삼성그룹에서는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명단에 올랐다. 한화그룹은 신현우 한화테크윈 대표이사가 간다.

중소·중견기업에서는 송무석 삼강엠앤티 회장, 강호갑 신영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김동우 부강테크 대표이사, 박성택 산하 회장, 정준 쏠리드 대표이사 등이 참가한다. 전체 경제인단의 약 70%가 중소·중견기업이다.

광주·전남지역 기업인으로서는 한양의 이기승 회장, 디케이주식회사 김보곤 대표가 포함됐다.

경제인단은 오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양국 상의 주최로 열리는 경제인행사인 '한미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다.

대통령을 수행하는 공식 행사 외에도 산업 시찰과 투자 세미나 등 활발한 민간 경제외교를 펼칠 방침이다. 이전 정부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에서 참가 기업을 선정했지만, 이번에는 대한상의가 그 역할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방미길에 여야 의원들의 동행을 제안해 '여야 협치수행단'이 꾸려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국회 대치 상황 속에 야당 거절로 불발됐다.

문 대통령의 제안 직후만 해도 자유한국당은 '부정적 검토' 의견을 나타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은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었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이후 각 당의 입장은 선회, "우리가 들러리냐"라며 '동행 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박지경기자jkpark@·연합뉴스

"만남 고대"…美상원 군사외교 4인방 文대통령 환영 성명

미국 공화당 중진이자 상원 군사위원장인 존 매케인(애리조나) 의원은 지난 23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하며 만남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매케인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문 대통령과 우리 앞에 놓은 많은 도전과 기회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첫 공식 방문은 한미 관계를 강화하고 심화시킬 중요한 기회"라며 "역내 위협과 적대감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국방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매케인 의원을 비롯해 벤 카딘(메릴랜드) 외교위 민주당 간사,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외교위 아태소위 위원장, 에드워드 마키(매사추세츠) 외교위 아태소위 민주당 간사 등 상원의 군사·외교 분야 핵심 4인방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문 대통령의 방문에 큰 기대를 나타냈다.

이들은 전날 문 대통령 방문을 환영하고 한미동맹 강화 및 미국의 한국 방위공약 재확인 등을 담은 상원의 초당적 결의안 발의를 주도했다. 결의안에는 여야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마키 의원은 성명에서 "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은 북한 정권이 도발적인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전례 없는 압력을 가하는 데 있어 양국이 협력하는 중대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외교·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초석이 되는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드너 의원은 "문 대통령이 북한의 '미친놈'과 중국과 러시아의 '조력자들'(enablers)로 인해 세계가 전례 없는 위험에 처한 가운데 미국을 방문한다"며 "이번 결의안은 한미동맹은 깨지지 않으며 양국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보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카딘 의원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로 양국은 많은 안보·외교·경제·문화적 유대를 공유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우리의 우정을 재확인하고 공통의 가치를 강조하며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